

보도일시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3. 10. 6.(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11건, 국회 본회의 통과

- 2종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형식승인 제도 미비점 개선·보완 등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의 법률안이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시설의 양도제한 규제를 없애고, 항만배후단지 내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2022. 11. 9.)'에서 발표한 항만 규제혁신 과제로, 민간 참여를 통한 2종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용 설비의 거짓·부정 형식승인 및 검정 등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제조·수입 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형식승인이 취소되면 이미 선박에 설치된 제품의 형식승인도 취소되어 그 부담을 선박소유자가 져야 했으나, 성능검사 및 보완·교환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성능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계속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 발견시 제조자 등이 보완·교체하도록 개선하였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내외 항만 개발이나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연관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공사가 국적선사의 국제 거점 터미널 확보 등 관련 업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금융 참여를 견인하고, 나아가 우리 해운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어획할당량 배분 기준을 마련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된 위원회를 정비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등 7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홍근형 (044-200-5160)
		담당자	사무관	조 술 (044-200-5163)

참고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부서

	법안명	주요 내용	담당 (044-200-0000)
1	항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종 항만배후단지 양도제한(10년) 해제 및 국유재산 특례기간 확대(20년→30년) ○ 신기술 활용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 	항만정책과 하승우 事 (5920)
2	해양환경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에 대한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 ○ 민간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 	해사산업기술과 윤용석 事 (5882) 해양환경정책과 이창민 事 (5289) 해양보전과 은재현 事 (5307)
3	선박평형수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에 대한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 	해사산업기술과 윤용석 事 (5882)
4	한국해양진흥공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진흥공사 업무범위에 국내외 항만개발 및 항만 운송연관산업 사항 포함 	해운정책과 김수연 事 (5716)
5	원양산업발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획할당량 배분 및 원양어선 안전펀드 근거 마련 	원양산업과 이은재 事 (5366)
6	수산물유통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판장 현대화 지원계획에 '위판장 위생여건 개선 사항' 포함 	유통정책과 윤기준 事 (5443)
7	수산자원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공단 사업 범위를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등으로 구체화 	수산자원정책과 정광월 事 (5536)
8	선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내 괴롭힘 금지 및 조치에 관한 규정 신설 	선원정책과 김행숙 事 (5743)
9	지방이양 관련 일괄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분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중앙 권한 및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마리나항만법」 등 4개 법률 일괄 개정)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황혜진 事 (5165)
10	행정 위원회 정비 관련 일괄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1개 위원회 통폐합 	혁신행정담당관 강성민 事 (5151)
11	수협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수협의 신용사업 수행 가능 근거 마련 	수산정책과 이상윤 肅 (5429)